

# IT강국 화려한 이면 '정책 부실' 질책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22일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부를 감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 추가 비리 문제 ▲KT 민영화 졸속 추진 및 탈세 의혹 등 몇가지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펼쳐 여·야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돼 무리 없이 지나갔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글 / 권경희 기자

10월 한 달 동안 국회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국정감사가 10월 22일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이 모두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 선진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됐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만 보호됐던 위치정보와 통화내역도 개인정보라는 정통부 해석을 이끌어내, 국감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희정·심재엽 의원은 불법 '친구찾기'에 악용되는 휴대폰 불법 복제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했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리콜이나 소프트웨어(인증키) 업그레이드는 현실성이 없어 정통부는 무선공인인증서 도입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류근찬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 정통부가 대책을 만들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혁신위와 시민 단체에서 각각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맞물리면서, 국감 이후에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포털 등 정보통신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촉구와 ▲공정위와 정통부의 통신시장 경쟁 정책 견해 차 재확인 ▲IT839 정책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방안 ▲CDMA 기술유출 여부와 ▲통신 요금 조정에 있어 소비자 권익 확보 방안 ▲통·방융합시대 법 제도 정비 ▲WCDMA,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 관련 정책 ▲SW를 비롯한 IT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1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국가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정보통신대

학교법 제정안'에 적극 반대한데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로 어수선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 국정감사가 끝났다.

## 17대 정쟁국감에서 정책국감 변화가능성 보여줘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은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이 강봉균, 김낙순, 김영춘, 변재일과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김영선·심재엽·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등이 "정보화촉진자금을 ICU에 공급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ICU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위증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위원장에게 위증 여부 조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17대 국정감사에도 정쟁국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한건주의가 줄어들었다. 일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 국감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특히 IT부처들에 대한 국감에선 의원들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기정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선 복제휴대폰과 무선인터넷의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통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김희정·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10월 7일 국감과 10월 21일 확인감사에서 거듭 이를 지적했으며 진대제 장관은 "개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복제폰 사용을 막고, 인증키 복제에 대응해 통신망에 복수 단말기가 접속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

다”고 답변했다.

### 공정위·정통부, 경쟁정책 견해차 확인

정책면에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과 관련, 공정위와의 이 중규제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따져 물으며 자율경쟁체제를 도입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감 역사상 처음으로 정무위와 과기정위에 통신위 사무국장 과 공정위 경쟁국장이 교차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통부와 공정 위의 통신시장 경쟁 철학과 현실 인식 문제가 공론화 됐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통부’와 요금인가제 폐 지를 주장하는 ‘공정위’ ▲경쟁환경이 성숙되지 않아 유효경쟁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정통부’와 무선이나 유선 시장에서 경 쟁을 할 만한 여건이 됐다는 ‘공정위’ 등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

이 문제는 ▲클린마케팅 등 통신사 담합여부 조사에 대한 공정 위 판결과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정점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이 독과점 상황이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 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통부는 “독과점 규제를 위해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유효경쟁정책의 근거를 보완하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겠다”며 정책 기초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 통신·방송 융합 법제도 정비 ‘한목소리’

문광위와 과기정위에서는 방·통 융합, 통·방 융합 시대 법제 도 정비가 이슈화됐다.

의원들은 통신과 방송 융합 추세에 맞춘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기업의 신사업 추진의지를 꺾는 경제손실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방송위의 제도안대로라면 통·방송합 서비스에 대한 이중규제가 불가피하므로 IT산업의 미래를 방송 위에 맡길 수 없다”며 “통·방송합서비스 등에 관한 제3의 법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별정방송 개념을 넣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변재일·천정배 의원의 설득으 로 열린우리당은 당장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방송 법에서 규제하지는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방송통신위원 회 설립 등 핫이슈는 정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곧 방송통신구조 개편위원회를 만들 예정이고, 진영(한나라당)·염동연(열린우리

당) 의원 등이 통·방송합법 제정에 관심을 두는 만큼 통·방송 합은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동연 의원(열린우 리당)은 “위성DMB 재송신 불허로 경제손실이 커져 생산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방송위 해체까지 거론했 다. 정통부는 “통·방송합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융합서비스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나 정확한 일정과 추진주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 ‘IT839’ 정책 의지에 ‘격려’ 정책 내용에 ‘질책’

정통부의 신산업 육성전략인 IT839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 지만 각론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IT839가 경제효과를 중복으로 책 정하는 등 정확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새 인프라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한화갑 의원 (민주당)은 “정부가 IT중소벤처를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IT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 과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PM의 책임성 및 제도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류근찬 의원(자민련)은 “정축기금 지원 대책이 연계돼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많은 질책과 보완주문이 많았지만 대부분 ‘IT839’에 대한 격려 분위기 속에 국감이 진행됐다.

국감 전 일부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도 했지만, IT839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전 략인 만큼 총괄 평가는 내년 국감으로 미루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부문에서는 인력수급, 각국의 경쟁력 비교 등 을 통해 추진상황을 재점검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기를 선도할 주력품목으 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들 품목에 대 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컸다. 또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높은 임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총체적 부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지원 사업의 성과와 위상 재정립 문제(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와 아이템 거래·게임 중독 등 게임의 폐해 문제(한 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또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산자위 감사에서는 정부의 7·7 중소기업 종합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지방청 이관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올 해부터 2007년까지 최소 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

는 중국과 유럽에 비해 턱없는 예산"이라며 "고급인력양성과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 최소 연도별도 250억원씩 1,000억원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도 "EU는 칼리브레와 코스파 프로젝트에만 각각 150만유로달러와 400만유로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공개SW 활용기반 정비사업에 지난해 10억엔에 이어 올해는 9.1억엔, 내년에는 18억엔을 투자키로 했다"며 SW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개SW에 대한 예산배정을 꼬집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공공기관 리눅스 운용체계 사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 공개SW 점유율은 데스크톱이 0.1%, 서버도 7%에 머물고 있고 공공부문 공개소프트웨어의 구축사업도 소규모 웹서버에 치중됐다"며 "획기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또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며 정보보호진흥원을 질타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는 해킹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기업, 하루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포털들이 매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제도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면서 "안전진단 수수료 기준과 안전진단필증 부여 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정책을 위해 진단대상의 확대, 수수료산정의 합리성, 진단 후 발생하는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등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해 위장사이트를 개설한 두 금융기관을 사칭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피싱(Phishing)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백화점식 중기정책 '남발'**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7·7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아닌 도산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상열 의원(민주당)도 "7·7 종합 발표 후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다"며 "중기청을 비롯해 재정부 등 중소기업 정책 관

련 부처가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실천 의지를 재차 물었다.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3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3만~4만여 개에 대해 실시하는 정부의 서면조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직권조사, 현장조사 비용 확대, 불공정 하도급 기업의 언론 공표 등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방 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중기청은 청와대와 여당 눈치 살피면서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지방청이 폐지될 경우 중기청의 위상을 어떻게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관장해 나갈 계획인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 2500억원이면 지난 2001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된 프라이머리 CBO의 디폴트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492억원의 재정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프라이머리 CBO의 손실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관련 책임자의 문책과 정부의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방향 전환' 지적**

문광위의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진흥원 대표 지원사업인 스타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02년에 2편이 출시됐고 지난해에 3편이 출시됐지만 흥행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진흥원은 단순한 개발비 지원에서 탈피해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도 "스타프로젝트 지원작 선정시 향후 상품화를 위한 타깃 설정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운 의원(열린우리당)은 "원소스멀티유스(OSMU)의 핵심인 만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문화산업대학원 설립계획에 대해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은 "새롭게 문화산업대학원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각종 문화산업 관련 대학과 학과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게임 관련 범죄가 급증해 10대 전과자가 연간 1만명에 이르고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이 연간 8,000억원 규모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심지어는 아이템 거래 업체들이 중국에 작업장을 만들어 1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와 게임 중독 문제는 노 의원 외에도 최구식·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등도 모두 제시해 게임계 최대 관심

사임을 드러냈다. 강혜숙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 게임 전쟁은 시작됐다”며 “중국의 자국 게임 보호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게임 지원책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의원도 다수 있었다.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아케이드게임이 54%, 비디오게임이 30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치우쳐 있다”며 “수출 시장을 고려해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과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원소스멀티유스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발전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영등위 ‘국감 회초리’에 진담

영등위 국감에서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미흡, 게임물 저작권 심의 방치, 심각한 지경에 이른 도박사이트 현금충전 문제 등 문광위 소속 위원들로부터 잇따른 질타성 문제제기에 곤혹을 치렀다.

이날 ‘못매’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전체 절반 가량이 법적으로 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됐다. 영등위가 답변자료로 밝힌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보고서(2004년 4월)’에 따르면 모니터링 당시 이동통신사에 제공된 모바일게임 150개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전체 47.3%(71개)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더구나 같은 의무사항인 등급표시도 등급분류를 받은 79개중 불과 14개(17.7%)만 따랐을 뿐 나머지 74.7%인 59개는 표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영등위측에 “게임 등급 분류 제도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선택할 때 바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등급분류 미필 모바일 게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계진 의원(한나라당)도 최근 한 유명 게임포털 담당자가 사이버머니를 직접 대량 현금 판매해 구속된 사건을 들며, 도박게임 관련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직접 충전’에 대한 대책과 영등위의 안일한 사후 관리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다수 포털에서 고스톱, 포커, 마작 등 도박류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매시스템에 탈법적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심의 및 사후관리는 전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소비자의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세금포탈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며 영등위를 몰아붙였다. 

## 2004 국감을 통해본 우리나라 정보화 현주소 ‘정보격차 해소정책 미비’

IT 강국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단면들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보격차해소관련법률’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국감 자료에서는 이 같은 우리의 정보화 현 주소를 반영하는 부정적인 수치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고PC 부처 기증률 0.55%, 70%가 펜티엄II급** =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중고PC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 위주의 보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 등 다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급 중고PC 중 70%가 펜티엄 II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 PC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강성종(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정부 부처가 기증한 중고 PC는 전체의 0.55%에 그쳐 부처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강 의원은 또 국회가 기증한 중고PC는 단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진 자·못 가진 자’ 간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 정보화가 진전될 수록

‘못 가진 자’의 소외의 골은 상대적으로 한층 깊어졌다. 진흥원이 올 상반기 실시한 정보격차 지수 조사 결과 저소득·저학력층의 정보 격차는 양적으로 크게 벌어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의 질을 측정할 질적인 정보활용 지수는 전체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18% 수준에 머물렀다. 2002년 기준으로 일반 국민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37%로 선진국에 비해 2배였다.

진영(한나라당) 의원실은 그 중에서도 남녀간 정보화 격차가 여전하다는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 실시한 계층별 정보 격차 실태 추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간 정보 격차는 2001년 12.8%에서 지난 6월 현재 12.4%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인터넷 중독, 전문 인력 태부족** =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7월 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직업별로 블루칼라는 87.7%, 주부는 86.1%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시력저하, 수면부족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성인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심재엽(한나라당) 의원실은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을 상담할 전문 인력이 전국적으로 250여 명에 불과해 1인당 1,300명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라고 분석했다.